

11

November 2018

No.76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리더칼럼

-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회장 이호명

이슈진단

- 일자리 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도 대안
- 경기도 100억 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 건설현장 안전제고를 위한 발주자의 책임 강화

연구원소식

- “공공 공사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발간물안내

- 건설정책저널-건설산업 혁신방안 특집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지향적인 건설문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이호명



숨이 막힐 정도의 더위와 늦은 태풍 등 여름의 혹독한 과정을 견뎌내고 살을 찌운 토실한 열매들이 대견스러운 계절입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야 하지만 만족할 만큼 노력의 결과를 거두고 있는 회원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도 침체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은 그 여파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속적인 건설경기 불황과 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인하여 우리 건설업계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은 일용직 근로자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건설업계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건설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혁신적인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경영노하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업은 외형적인 성장은 계속해왔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산업 중에 하나로 분류되어 사양산업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에도 일부이지만 생산단계마다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하고, 3차원의 도면을 그리고, 구조를 해석하여 설계하고, 공사에 투입될 자원을 산출하거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이미 건설분야의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건설인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공사에 대해서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자기

혁신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도태되지 않고 경영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우리 전문건설인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위한 정책개발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힘들다고 멈추는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의 어깨를 기대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도 대안

박선구 연구위원 (parksungu@ricon.re.kr)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적정 성장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핵심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28일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1~9월 평균 15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 명(6.9%) 늘어난 수치로서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99년 6월 이후 최대수준이다. 또한 올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1000명 늘어났으며, 이 또한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치다.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 역시 올해 월평균 51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1000명(6.5%) 늘었다. 반면, 실업자를 위한 정부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올 1~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377억 원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에 지급한 실업급여(4조929억 원)보다 9,448억 원(23.1%) 많았다.

고용지표의 악화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경제가 좋지 못하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역시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던 투자지표 역시 하향세가 뚜렷하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대외여건 역시 녹록치 않다. 금리인상, 미·중간 무역분쟁 격화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작년부턴 추경예산과 일자리 정책 지원금으로 3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고용지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경제지표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투자의 활성화는 일자리 정책에 있어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7% 이상을 담당하는 산업이며,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주거·환경·안전 등 인프라 투자에 8조 원 이상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교통 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SOC 예산 증액을 통한 공공부문의 투자 활성화와 함께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 방안 역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투자에 비해 민간투자 금액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여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악화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건설부문의 활성화가 대안이 되어 그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100억 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홍성호 연구위원 (hsh3824@ricon.re.kr)

경기도는 최근 2년간 발주한 10억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32건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예정가격이 평균 4.5% 절감될 것이라 추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 시 기존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를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018년 9월 13일 입법 예고하였다.

표준시장단가는 종래의 실적공사비의 문제점을 보완한 단가로서 기존에 수행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공종별 최종 단가를 조사해 만든다. 중소건설사의 육성을 위해 현행 예정가격 산정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표준시장단가가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표본 부족과 낙찰률에 따른 단가 하락요인이 많다. 지금도 표준품셈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표준시장단가를 중소 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할 경우,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품질 하락은 불가피하다.

둘째, 표준품셈은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조사가 이뤄져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인력, 장비 등을 원가 분석방식으로 적용해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현행 규정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다르다. 즉,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의 실행(실제집행)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클수록 자재 등을 대량 공급할 수 있어 공사 단가가 더 낮다. 이것이 바로 표준시장단가를 중소형 공사에 적용하면 4% 이상 공사비가 줄어드는 이유다.

셋째, 공공 발주자가 국민이 낸 세금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 하락은 시설물 보수 또는 유지관리 주기를 조기 도래시켜 생애주기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고, 이는 다시 동일 시설물의 수요증가로 이어지는 등 지속적인 악순환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절감하고자 하는 대상은 초기 투자비인 공사비가 아니라 생애주기비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가장 싼 가격에 시설 공사를 조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공공재 생산에 기여하는 건설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제대로 된 시설물을 조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많은 건설업체들이 이윤은 고사하고 회사돈을 더해 공공 시설물을 준공하고 있다. 발주자인 정부가 건설사를 공공 시설물을 조달하는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동반자에게 지속 가능한 이윤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정책목표이고 수단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건설현장 안전제고를 위한 발주자의 책임 강화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7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64명 중 52.5%(506명)가, 2018년 상반기까지 전체 503명의 사고사망자 가운데 46.7%(235명)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다.

건설 산업의 산업재해 감소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올해 1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는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도급자의 안전관리 역할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10월 국회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2건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다. 2일 임종성 위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권 현실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실정보고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감리 강화 방안과 건설현장 점검제도 실효성 제고, 발주청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제재 신설, 건설사고 신고 대상 확대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10일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발주청의 의무사항으로써 품질확보와 함께 안전 확보를 명시하였다. 또한 발주청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완함으로써 발주청의 안전 확보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과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은 당사자인 원·하도급 업체와 감리 업체에 부과되어 현장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는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업체 및 감리자뿐만 아니라 발주자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가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는 어떠한 과제가 부과될 수 있을까.

2012년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발주자의 과제로써 △ 현장에서 건설업체들에 대한 안전 지도, △ 공무원의 안전 관련 지식 향상, △ 현장을 자주 방문하도록 하는 제도와 함께 △ 적절한 공기설정 및 △ 적절한 적산 등을 제시하였다. 즉 발주 공무원들도 안전관계 법규 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건설업체들과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 건설업체들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리한 비용과 무리한 공기는 안전사고로 이어지므로 적절한 비용과 공기를 확보해주어야 하며 이는 발주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발주자가 현장의 안전 문제를 현장의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꾸준한 관심을 가진다면 건설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공 공사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S · E · M · I · N · A · R

공공 공사기간 합리화 방안

2018. 11. 15(목), 15:00~17:00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시 신대방동 소재)

개 회 (15:00 ~ 15:10)
▶ 참석자 소개
▶ 개최사: 서명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 축 사: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 환영사: 김용수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주제발표 (15:10 ~ 16:00)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사례 및 시사점
- 발제: 김경래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해외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현황과 시사점
- 발제: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16:10 ~ 16:50)
▶ 좌장: 김용수 중앙대학교 교수(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 패널: 안정훈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과장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이오성 LH공사 고객품질혁신단 단장
김응일 서천건설(주) 대표이사
김경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상무
박영신 환경부동산연구소 소장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질의응답 및 폐회 (16:50 ~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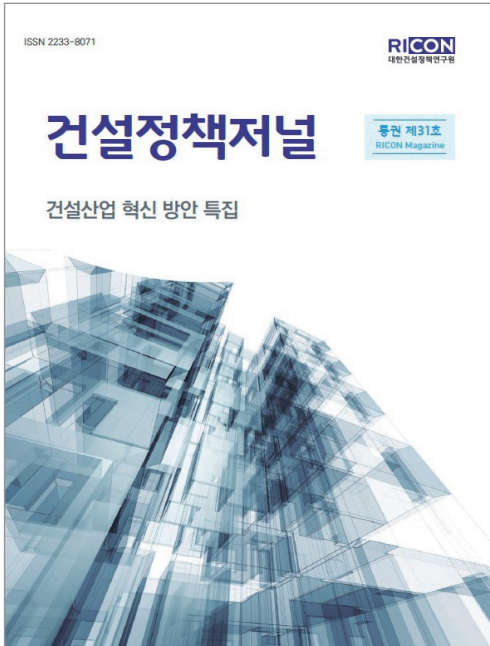
| 공동주최 |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KICEM** (사)한국건설관리학회

우리 연구원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3시 전문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서명교 원장)이 ‘공공 공사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김경래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사례 및 시사점’을,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공공 건설사업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 할 예정입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수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안정훈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이오성 LH공사 고객품질혁신단 단장,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응일(췌)서천건설 대표이사,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박영신 환경부동산연구소 소장,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설정책저널 - 건설산업 혁신방안 특집



건설산업은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정부는 '건설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 재정 당국의 의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31호에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논의가 필요한 건설산업 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 특집'을 구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저널이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여야 하는 정책적 제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